

# 이재명, 검찰 재출석 '배웅 금지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SNS에 "혼자 다녀오게 해달라" 메시지... '검찰 수사' 자신감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당내에 사실상 '배웅 금지령'을 내리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파열을 최소화해 주력하고 있다.

측근 의원들의 이른바 '병풍 동행'을 두고 여론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조차 '방탄용 세(勢) 과시' 혹은 '이재명 사당화(私黨化)'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1차 소환 조사 당시 당내에 '동행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해서 출석 현장에 동행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비서실장과 대변인마저도 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안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시십쇼'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출석에 동행해 주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도 '현장 동행' 자제를 당부했다.

'나 홀로 출두' 의지를 강하게 밝힌 데에는 '정치 희생양'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일부 시선도 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며 검찰 재출석 의지를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조사 때 서면진술서를 이미 냈으니 그것으로 감할 예정"이라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또다시 부르는 것은 철저히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비명(비이재명)계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당내 '이재명 흔들기' 발언이 잠잠해진 것이나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에 비명계가 다수 참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평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좀 나왔으나 지금은 검찰 성도 목소리가 훨씬 커졌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결연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명(진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 명의 검사가 달려붙어 수년간 수사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으로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것이 없으면 무혐의라고 보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압색영장 판사 사전 심리' 대립

### 대법 "필요하면 압색영장 '대면' 심리"... 검찰 "수사 무력화 우려"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의 움직임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압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써내면 판사는 영장 청구서를 읽어본 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은 밀행성(비밀성)과 신속성을 강조했고, 청구서만 볼 수 있는 판사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대개 영장을 발부해왔다.

이 때문에 압수색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천496건)를 기록하는 등 판사의 대면 심문이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2021년 기준 82.0%·1만8천34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색의 실제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규칙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민생 부담·에너지 전환·의료 공공성 질타

### 대정부질문 3일째...이용빈 "졸속 행정에 국민 혜택 기업이 가져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증폭된 민생 부담과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 등 3대 역주행 정책을 질타했다.

또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유류세 인하 때처럼 정부의 무능한 판단으로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영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낼 관세를 안 냈으니 횡재본 것과 같다"며 횡재세와 에너지불가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 이후, 정부의 지원대책이 중복 지원과 지원 대상 문제를 거론하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색내는 게 급했던 건지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책과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노후주택에 사는 이

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기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광주·전남 물부족 문제를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유수율 제고, 장기적 물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확실히 안 하실거냐. 하겠다는 얘기로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냐. 어느 의원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거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미 (검사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문서 자체,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 들어가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제가 추진한다면 공소장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이상민 탄핵은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장관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10·29참사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반성도 책임도 없이 되레 유가족을 향한 망언을 쏟아내고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장관을 감싸고 들

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국회의 절차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또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기록은 중요치 않다"면서 "국가가 지니는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방기하고 헌법 가치를 내동댕이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 여의도 브리핑

## 정부가 산업단지·입주기업 안전점검 주관

### 김희재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

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단지 내 대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명(98.4%)에 달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중심 상업지구**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    |                                     |
|----|-------------------------------------|
| 광주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
|    |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
|    |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
|    |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
|    |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
|    |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
|    |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
|    | 북구 오서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

010-2614-9801